

한국 창업 생태계의 지역·산업·조직적 복합 구조 분석: 2025년 4분기~2026년 1분기 전환기를 중심으로

김재호*

*청운대학교 무역물류학과

e-mail:jaehokim@chungwoon.ac.kr

Korean Regional Startup Trends and Statistics 2025-2026

Jae-Ho Kim*

*Dept. of Trade & logistics,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국 창업 생태계의 지역적·산업적·조직적 복합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전체 창업 기업 수는 2025년 11월 87,863개에서 12월 102,529개, 2026년 1월 105,097개로 단기간 내 뚜렷한 양적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2026년 1월 기준 경기도(31,311개)와 서울(21,417개)**이 전체 창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가 확인되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업(2026년 1월 92,760개)이 전체 창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도소매업(35,505개)과 숙박·음식점업(10,971개) 등 생계형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술기반업종은 2025년 12월 25,082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26년 1월 23,899개로 소폭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 창업(95,534개)이 법인 창업(9,563개)보다 약 10배가량 많아, 소규모 개인 창업 중심의 생태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은 통계적 체계화의 계기가 되었으나, 시계열 분석 시 데이터 연속성 확보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창업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와 기술기반 법인 창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창업 증가 현상을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닌, 창업 구조의 질적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향후 창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창업 생태계, 지역 창업 격차, 기술기반 창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법인 및 개인 창업

해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산업·조직 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은 향후 정책 설계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현대 경제 체제에서 창업은 국가의 혁신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고용 창출 및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신규 기업의 탄생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표한 '창업기업동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전환기 창업 시장을 지역, 산업, 조직 형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해당 기간의 창업 총수 추이와 더불어 지역별, 업종별, 조직 형태별 세부 지표를 통해 한국 창업 시장의 역동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창업 생태계의 성장이 어떠한 산업적·지역적 배경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단기 창업 통계를 구조적 관점에서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개요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전국 창업 기업이며, 지역(17개 시·도), 업종(대분류), 조직 형태(법인 및 개인)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시계열 연속성 확보: 2026년 1월부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 데이터와의 정확한 비교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10차 개정 기준을 준용하여 분석하였다.

② 비식별화 처리 준수: 소스 통계의 지침에 따라, 업체 수가 1~2개인 경우 해당 업체의 비밀 보호 및 추정 가능성 배제를 위해

수치를 비식별화(X) 처리한 원칙을 분석 과정에서 인지하고 반영하였다.

③범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3개월간 창업 현황을 전수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기업 수의 증감 자체보다, 창업이 개인·서비스업 중심의 생태계 창업과 기술기반법인 중심의 혁신형 창업이 병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 틀은 이후 지역·산업·조직 형태별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3. 본론

본 연구는 창업 기업 수의 증감 자체보다, 창업이 어떠한 지역·산업·조직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창업 증가의 배경과 성격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의 질적 함의를 함께 해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 기간은 연말·연초 예산 및 정책 집행 시기와 맞물린 전향 기로, 창업 통계 해석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이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3.1 창업 규모의 시계열 추이

2025년 11월 이후 국내 창업 기업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1월 87,863개였던 창업 수는 12월 10만 개를 돌파하였으며, 2026년 1월에는 105,097개에 이르고 있다.

[표 1] 월별 창업 총수 증감 수

| 월별 | 2025.11 | 2025.12 | 2026.01 |
|-------|---------|---------|---------|
| 창업 숫자 | 87,863 | 102,529 | 105,097 |
| 증감 숫자 | | +14,666 | +2,568 |

2025년 11월 대비 2026년 1월의 창업 총수는 약 19.6% 증가하며 견조한 양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기반업종의 경우 2025년 11월 17,478개에서 12월 25,082개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26년 1월에는 23,899개로 소폭 하락(전월 대비 -4.7%)하며 전체 창업 증가세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전체 창업 기업 중에서 개인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월별 창업 총수 증감 수

| 월별 | 2025.12 | 2026.01 |
|-------|---------|---------|
| 법인 창업 | 9,216 | 9,563 |
| 개인 창업 | 93,313 | 95,534 |

법인 창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의 약

91%가 개인 창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소규모 창업 중심의 생태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 창업 증가가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특히 증가세의 상당 부분이 개인 창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적 확대 이면의 창업 성격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3.2 지역별 창업 현황 분석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창업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된 상태이나, 비중 면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관측된다.

[표 3] 주요 지역별 창업수(2026년 1월 기준)

| 순위 | 지역 | 창업 기업 수 | 비중(%) |
|----|----|---------|-------|
| 1 | 경기 | 31,311 | 29.8 |
| 2 | 서울 | 21,417 | 20.4 |
| 3 | 인천 | 6,558 | 6.2% |
| 4 | 부산 | 5,649 | 5.4% |
| 5 | 경남 | 5,565 | 5.3% |

수도권의 창업 절대 수치는 경기(31,311개), 서울(21,417개), 인천(6,558개)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약 1.3%p 감소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요 거점 광역시별 2025년 11월 대비 2026년 1월 성장률을 분석하면, 대구(3,095 → 4,036, 30.5%증가)가 두드러진다. 이 외에도 부산이 약 24.9%(4,520 → 5,649)증가하였으며, 대전도 약 23.1%(2,261 → 2,783)증가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최상위 지역인 경기(31,311)와 하위 지역인 세종(680), 제주(1,621)의 격차는 여전히 수십 배에 달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업의 절대 규모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대적 성장률 측면에서는 일부 비수도권 지역이 잠재적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3 산업별 및 주체별 분석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026년 1월 기준 92,760개로 전체 창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2025년 11월 32,203에서 2026년 1월 35,329개로 최대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동산업은 2025년 12월 9,042개에서 2026년 1월 11,329개로 한 달 사이에 약 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6년 1월 10,971개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은 2025년 11월 2,378개에서 2026년 1월 3,297개로 약 38.6%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4] 제조업 분류 (2026년 1월)

| 업종 | 기계 금속 | 음식료품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 섬유 및 가죽 |
|----|-------|------|-------------|---------|
| 숫자 | 855 | 511 | 455 | 398 |

조직 형태별 분석 결과를 보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법인 설립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법인 비율은 2026년 1월 현재, 약 9.1%로 나타났으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법인 창업 비율이 25.3%로(1,466/5,791)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이 높은 자본 집약성 및 대외 신뢰도를 요구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산업별·조직 형태별 분포는 창업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창업의 질적 성격을 함께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기반 창업의 조정 국면은 경기 불확실성, 자금 조달 환경, 정책 지원 구조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한 분석 가설로 남는다. 이러한 산업별·조직 형태별 분포는 분석 시점이 연말·연초 전환기라는 제도적 환경과 연계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개인·서비스업 창업의 증가는 정책·세제 요인에 대한 단기적 반응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술기반 창업은 자금 조달 및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조정 국면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 한국 창업 생태계의 현주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창업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징과 한계를 보인다. 첫째, 양적 성장과 수도권 집중의 고착화이다. 전국 창업 기업 수는 2025년 11월 87,863개에서 2026년 1월 105,097개로 증가하며 양적으로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도(31,311개)와 서울(21,417개)이 전체 창업의 과반을 차지하는 집중 현상은 여전하며, 이는 지역 간 경제 활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서비스업 중심의 개인 창업 구조이다. 전체 창업 중 서비스업이 92,760개(2026년 1월 기준)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도소매업(35,505개)과 숙박·음식점업(10,971개) 같은 생계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법인 창업(9,563개)에 비해 개인 창업(95,534개)이 10배 가까이 많아, 기술 중심의 조직적 창업보다는 소규모 영세 창업

이 생태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기술 기반 창업의 변동성이다. 기술기반 업종은 2025년 12월 25,082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26년 1월 23,899개로 소폭 감소하는 등 조정 국면에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창업을 지속해서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정교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창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창업의 숫자를 늘리는 양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수도권의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생계형 서비스업보다는 기술기반의 법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통계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창업 수의 증가가 곧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창업의 질’이란 창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생계형 창업보다 기술기반·법인 창업의 확대를 통해 가능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창업 정책은 양적 확대보다 창업 구조의 질적 전환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및 기술 창업 보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단기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창업 추세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술통계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창업 증가의 원인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창업 기업 수 중심의 분석으로 인해 생존율, 고용 창출 등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산업분류 체계 전환기와 일부 자료의 비식별화 처리로 인해 세부 산업 분석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장기 시계열 분석과 질적 지표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중소벤처기업부 (2026). 업종별 창업기업수 (통계표 ID: DT_142N_F201). 창업기업동향. KOSIS 국가통계포털
- [2] 중소벤처기업부 (2026). 지역별 창업기업수 (통계표 ID: DT_142N_F204). 창업기업동향. KOSIS 국가통계포털.
- [3] 중소벤처기업부 (2026). 통계표 주석: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및 시계열 연속성 확보 지침